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6-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051-309-4092, FAX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 의식과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민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3. 심층조사,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4.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법 제4조에 따른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관 등에 자살 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

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심층조사 실시와 자살통계관리를 위해 북부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 유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둔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의 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하고, 각종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교육·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⑤ 구의 기관 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법 제25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